

지역공공재와 지방세출에 대한 이해: 경제 이론 및 실증적 관점

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오 병 기

I. 머리말

한국에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도 십 수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과거의 집권적 경제성장 방식을 벗어나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요즘에는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역경제에서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각급 학교의 교육 역시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지방재정과 관련된 주요 이론과 실증적 분석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의 관계, 지역공공재로 기능하고 있는 지방세출의 역할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국내에서 지방세 부문에 집중되고 있는 지방재정 연구들과 균형을 맞추는 시각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공공재 및 지방세출과 관련된 이론과 실증 분석 사



례를 정리함으로써, 관련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지역 주민, 교육계 종사자들에게 지방재정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세출은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이다. 최근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그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제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조정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경제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찾아야 한다. 이 때 지방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연구를 보면 다양한 지역공공재 공급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지역공공재를 공급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향후의 정책에도 적극 반영한다면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적극적 성장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역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한 자원 조달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자원배분의 문제가 등장한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하여 지역공공재의 공급 재원은 지역 자체에서 조달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경제적 사정이 열악한 다수의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중앙정부를 비롯한 상위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상위정부의 보조금과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이 지역공공재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분석한 연구들을 통하여 우리나라 지역공공재의 공급이 이론적, 실증적으로 효율적인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 역시 널리 알려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가 향후의 정책을 수립할 때 이들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역공공재의 공급 과정과 지방세 및 의존재원의 조달 과정, 지방세출의 집행 과정 전반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이들 이론을 검증한 실증적 분석 결과를 참조하면서 지방재정 전공자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자치단체 공무원 등 다양한 독자에게 지방재정 전반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지역경제의 순환과정과 지방세출의 역할

국민경제에 순환과정이 존재하는 것처럼 지역경제에도 순환과정이 존재한다. 이러한 순환과정을 먼저 검토한다면, 이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방재정의 기능을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 과정을 살펴본 후 각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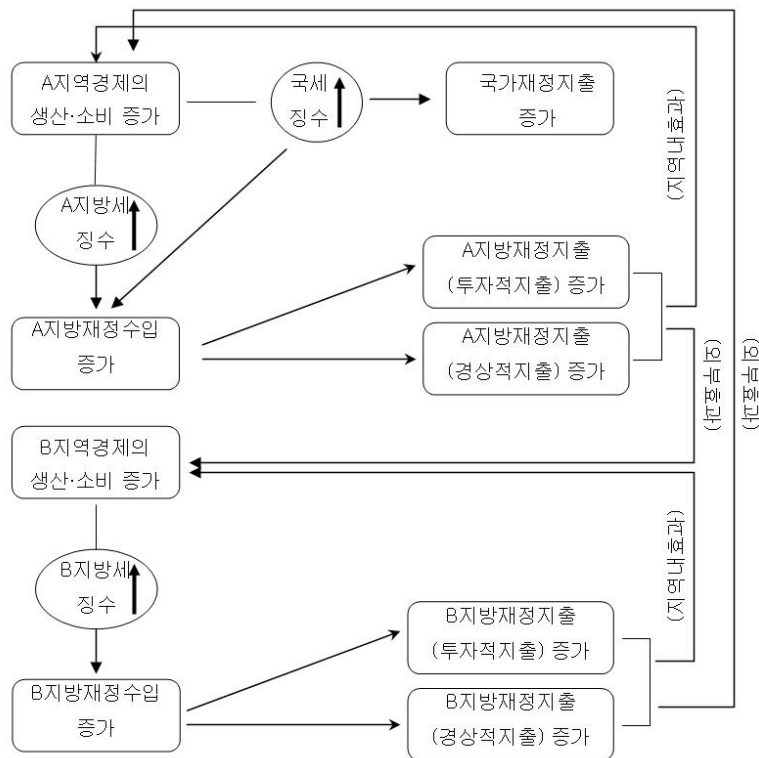




에 적용되는 이론과 이를 검증한 실증분석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지방재정활동과 지역경제활동은 상호순환 과정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승수적 관계로 존재하고 있다. 즉, 특정 지역의 경제력은 그 지역의 자연적·인적 제약 하에 경제활동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 지역의 소득수준과 분배로 결정된다. 이러한 지역적 소득상황은 나아가 지방세의 규모와 구조를 결정짓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세출의 규모와 구조가 영향을 받게 된다. 지방세출 활동은 또 그 지역의 생산활동과 같은 제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지역의 경제력과 지방재정지출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림 1> 및 이하의 설명은 이를 이산적(離散的)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것이다. 2단계로 크게 구분하자면 (1) 지역경제활동의 축진이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바그너 구간)와 (2) 지방재정활동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케인즈 구간)로 나눌 수 있다.

<그림 1> 경제변수와 재정변수 사이의 순환적 인과관계



자료: 오병기(2009), p. 4.

먼저 (1) 바그너 구간으로서 지역의 경제활동이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를



살펴보자. 한 지역의 경제활동이 촉진되면 그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가하는데, 지역간의 높은 이동성으로 인하여 그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주민들의 소득도 증가한다. 이러한 경향은 수도권 지역의 위성도시와 서울특별시의 관계에서 잘 나타난다. 대부분의 취업인구는 서울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지만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위성도시에서 거주하는 지역주민에게 귀속되므로 서울에서 위성도시로 경제활동의 결과가 유출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구체적으로 본다면 그 지역의 경제활동 촉진이 ① 그 지역주민의 소득증가로 이어지는 부분과 ② 다른 지역주민의 소득증가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¹⁾ 한편 반대 방향으로의 유입효과와 반향(反響)효과 또한 존재하기에 특정 지역에서 경제활동 증가 이후 지역주민 소득이 얼마나 유출되고 반향되는지 실증적으로 파악한 연후에야 지역주민 소득 증가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게 된다.

지역의 경제활동 촉진 이후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가하면 그 후에 지방재정의 세입 및 세출이 증가하는 연속적 단계를 거치게 된다. 즉, 지역주민의 소득 증가는 지방세 등 지방정부의 자체재원과 중앙정부의 국세를 증가시키게 된다.²⁾ 이렇게 확충된 세입으로 지방정부는 세출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경상적 지출과 투자적 지출이 모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그 증가율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는 지방세 등의 자체재원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공공재를 제 때 공급하는 문제가 중요한 이슈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지역공공재를 공급하는 지방세출(투자적 지출)의 비율과 일상적인 행정활동에 소요되거나 이전경비에 지출되는 지방세출(경상적 지출)의 비율이 각각 적절한가 하는 문제도 중요한 이슈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2) 케인즈 구간으로서 지방 세출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를 살펴보자. 지방정부의 세출 활동은 지역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데, 그 규모와 구성이 직접적·간접적으로 지역경제활동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가령 투자적 지출 증가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이어져 생산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하여 지역경제활동이 활성화되지만, 만약 경상적 지출이 증가하면서 투자적

1) 이런 이유 때문에 지역내총생산(GRDP)를 통하여 지역내 주민들의 소득수준을 가늠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2) 한 지역의 경제적 성과를 세입 면에서 분석할 경우 국세로 걷히는 부분과 지방세로 걷히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이 세원배분의 문제인데, 이는 곧 지방재정의 자립수준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와 국세의 징수 비중이 20:80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거둬들인 지방세만으로는 지방재정을 꾸리기 힘든 실정이므로, 중앙정부가 국세 중 일정 부분을 다시 지방정부에게 나누어주고 있다. 이러한 재원을 의존재원이라고 하며, 2007년 현재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그러한 의존재원을 구성하고 있다.





지출이 감소한다면 이러한 순환과정의 연결고리는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수립한 지역개발계획과 자주적으로 설계한 재정활동의 계획·집행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한편 특정 지방정부의 세출 활동은 그 지역주민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령 특정 지역의 지방도(地方道)는 그 지역의 지방정부가 건설하지만 타 지역주민들의 이용을 막을 수 없기에, 다른 지역주민들에게 그 지역공공재의 편익이 누출되는 효과가 발생하며, 이를 지역공공재의 외부효과라고 한다. 이러한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특정 지역의 지방정부는 효율적인 수준보다 적은 양의 지역공공재를 공급하게 되는 경향이 존재하기에, 이러한 외부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편익 수혜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³⁾

〈그림 1〉은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사이의 상승적 순환과정만을 요약한 것이지만, 만약 지방정부의 정책적 처방이 잘못되었거나 순환과정의 고리가 끊기는 상황이 존재한다면 지역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쇠퇴하는 순환과정 또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가령 지역 소득 증가 후에 공공부문 중 이전경비 등의 정상적 경비가 더 크게 증가한다면 상승적 순환과정을 가져오지 못하여 그 후에는 경제가 쇠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방세출은 지역공공재로서 지역주민의 후생수준을 제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양적·질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지방세출을 유지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성장과 직결되기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지역경제의 순환과정을 염두에 두고 지역공공재 이론, 지역공공재 및 지역소득의 외부효과, 성장이론과 연관된 지방세출 이론 및 실증분석 사례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한다.

Ⅲ. 지역공공재와 자원배분

1. 지역공공재와 수요함수 추정

일반적으로 다양한 연구에서 지방세출을 지역공공재의 대리변수로 많이 활용하기에, 이하에서는 지방세출과 지역공공재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겠

3) 이상의 내용은 우명동(2001, pp.37-48) 및 오병기(2001; 2006b) 등 참조.





다. 특히 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투자적 지출은 지역경제의 사회간접자본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지역공공재의 특성을 가지기에 많은 연구에서 이 세출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순수공공재의 경우,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징 때문에 국가가 조세를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직접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한편 지역공공재는 편익의 파급 범위가 국지적(局地的)이기에, 지방정부가 지방세를 징수하여 재원을 조달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즉, 지역공공재는 국가(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그 이유에 대하여 Oates(1972)는 분권화 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를 주장하였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공공재의 공급량을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더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의 이득이 없는 한 지방정부가 지방세 등의 자체재원으로 지역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바탕 하에, 지역공공재가 실제로 효율적으로 공급되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존재한다. 중위투표자 모형에 바탕을 둔 지역공공재 수요함수의 추정이 그런 방법 중 하나이다. 특히 Bergstrom and Goodman(1973)의 중위투표자 모형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국내에서는 김성태(1994), 국중호(2003), 오병기(2004; 2006c; 2007) 등이 이 모형을 이용하여 지역공공재의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자세한 이론적 내용은 원문 및 이들 국내 문헌을 참조하고, 본고에서는 직관적인 설명으로 간략히 대신하도록 한다.

Bergstrom and Goodman(1973)의 수요함수는 거시자료를 이용하여 수요함수를 추정할 때 유용하다. 이 모형에서는 각 개인이 미분 가능한 준오목 효용함수를 가지고 있으며 사적재와 공공재, 주택을 소비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각 개인은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기호 역시 차별적이라고 가정한다.

개인의 소득제약 하에서 효용극대화 문제를 풀면 개인의 수요함수가 도출되는데, 이때 개인은 소득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예산에도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개인의 지역공공재 수요함수에는 개인의 소득 및 공공재의 가격부담(지방세 부담)이 포함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거둬들인 세입인 지방세뿐만 아니라 상위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도 예산에 반영하기에, 수요함수에는 의존재원 역시 포함된다.

일반적인 개인의 수요함수는 식 (1)과 같은 형태를 띈다.

$$G^* = g(Y, P_G; Z) \quad (1)$$

G^* : 효용을 극대화하는 지역공공재 수준





Y : 소득

P_G : 공공재의 가격부담

Z : 기호를 나타내는 특성변수

Bergstrom and Goodman(1973)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공재 수요 이론은 개인들이 집합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를 동일한 양(가령 G_0)만큼 수요한다고 가정한다. 공공재의 소비에서 발생하는 혼잡 때문에 G_0 는 지역사회의 인구(즉, N)에도 영향을 받는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역공공재의 수요함수 추정법 중에서 지방정부의 거시 지출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 추정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추정법에서 활용하는 수요함수는 일반적으로 식 (2)와 같은 형태를 띤다.

$$\begin{aligned} \log G_0 = & \beta_1 + \beta_2 \log Y + \beta_3 \log P_G^0 \\ & + \beta_4 \log GIA + \beta_5 \log N + \beta_6 \log Z + \epsilon \end{aligned} \quad (2)$$

즉, 임의의 지역에서 특정 지역공공재(지방 세출; G_0)의 수요가 그 지역주민의 소득(Y), 공공재의 가격(지방세; P_G^0), 상위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의존재원(GIA), 그 지역의 주민 수(N), 특성변수(Z) 등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⁴⁾

지방세출의 결정요인을 추출하거나 지역공공재 수요함수를 추정한 해외 문헌으로는 Edwards(1990), Crane(1990), Falch and Rattsø(1997; 1999), Heinesen(2004) 등을 들 수 있으며, 한국에서 지역공공재의 수요함수를 추정한 연구로는 김성태(1994), 강준규(1999), 박정원·최진수(1999), 국중호(2003), 황규선·김병현(2003), 김봉진·김일태(2004), 오병기(2004; 2006c; 2007) 등을 들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에서 이루어진 지역공공재의 수요함수 추정에서는 지방세의 가격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지방세가 효율성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역공공재가 효율적인 수준으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4) 그런데 중위투표자 모형이 가장 비판받는 부분은 이 모형으로 공공지출 수준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 모형이 아닌 다른 정치 이론으로 공공지출 수준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Romer and Rosenthal(1978)에 따르면 중위투표자 모형으로 추정된 수요함수의 문제점으로 첫째, “배수의 오류(multiple fallacy)”, 둘째,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을 구별할 수 없는 문제를 들고 있다(Rubinfeld, 1987, p. 609).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입 중에서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상황, 즉 재정자립도가 낮게 나타나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개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소득 증가에 발맞춰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공공재를 공급하여야만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간 자원배분과 관련된 광범위한 제도적 개혁과 지방세출의 품목이나 공급할 지역공공재의 선정과 관련된 지역주민의 의사결정 방식 등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꼭 필요할 것이다.

2. 지역공공재의 외부효과와 지역소득의 유출입효과

지역경제의 순환과정을 보면 바그너 구간에서 지역경제력의 증가가 지방재정활동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케인즈 구간에서 지역경제력 증가, 혹은 지역주민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연쇄적 과정을 보이게 된다. 그런데, 개방된 경제에서 지역의 경제활동이 전적으로 그 지역주민의 소득만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가령 연고지가 다른 주민이 타지역에서 고용될 경우, 생산활동을 통하여 증가하는 부가가치가 그 지역의 주민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순환과정은, 따라서 한 지역에서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가령 서울의 지방세출이 증가하면 서울의 지역내총생산도 증가하겠지만, 서울과 경제적·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천이나 경기도 등 수도권 내 다른 지역의 지역내총생산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요즘과 같이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이 활발한 시기에는 한 지역의 지방재정지출이 증가하면 그 파급효과가 그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도 파급될 것이다. 이러한 누출효과가 존재할 때, 한 지역의 재정지출효과가 그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으로 파급된 재정지출의 효과가 반향(反響)되어 돌아오는 효과를 생각해 본다면 반드시 재정지출의 효과가 줄어든다고 단언할 수 없다. 가령, 서울에서 투자적 지출이 증가하면 누출효과로 인하여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이나 경기도 등 수도권 전반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지역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성장한 지역은 세수가 증가하여 다시 지방재정지출을 증가시킬 여력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시간이 흐른 후,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전반의 지방재정지출 수준이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경기도나 인천 등 수도권의 지방세출 효과가 서울로 역(逆)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반향효과를 고려한다면, 서울의 지방재정지출효과의 누출보다도 타 지역의 지방재정지출효과가 역유입되는 부분이 더욱 클





수도 있다. 따라서 한 지역의 지방재정지출 효과가 얼마만큼 누출되며, 이것이 지역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하는 것은 선형적으로 알 수 없고 실증분석을 통해야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유출유입효과를 단순화하면 ①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유출되는 효과, ② B지역에서 A지역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존재하며, A, B지역의 지방세출과 지역경제의 상호작용에 따라 다양한 유출입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 중 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지방세출이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역공공재의 외부효과로 명명되어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우명동, 2001, pp. 187~191). 또한 지역경제의 성과인 부가가치나 소득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효과에 대해서는 중심지이론(central place theory)에서 파급효과(spread effect)와 역류효과(backwash effect)의 총합인 일출효과(spillover effect)로 명명되어 연구되고 있다(전도일, 2000, pp. 163~167).

지방세출의 외부효과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연구는 티부(Tiebout, 1956)의 ‘이동 투표모형(voting by feet)’이 그 효시로서, 지역간 이동성과 분권적 지역공공재 공급에 관한 논의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티부의 ‘이동 투표모형’은 지역간 완전한 이동가능성과 완전정보가 존재할 때, 그리고 지역공공재의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을 때 지역주민들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파레토 효율적인 균형을 이루게 되며, 이로 인해 분권적 지역공공재 공급이 지지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티부의 이동투표모형은 가정의 비현실성 때문에 종종 비판받고 있는데, 특히 지역공공재의 외부효과가 존재한다면 티부의 가설은 설득력을 잃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공공재의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지역주민은 굳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아도 해당 지역 인근에서 지역공공재의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⁵⁾

Musgrave and Musgrave에 따르면 첫째, 편익의 파급지역이 복잡할수록, 둘째, 지역경제의 개방성이 더욱 커져 인구와 생산요소의 지역간 이동이 활발할수록, 셋째, 편익의 이론적인 파급지역과 실제 행정구역의 괴리가 클수록, 과세지역과 편익지역이 일치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아지며 외부효과의 크기가 커진다고 보았다(Musgrave, R.A. and Musgrave, P.B, 1980, pp. 527~528).

지역공공재(지방세출)의 외부효과에 대하여 좀 더 집중적으로 조명한 연구들은 분권화의 잠재적 이득과 집권적 조정의 이득에 대하여 어느 쪽을 우선시할 것인가에 따

5) 이를 달리 해석한다면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는 지방정부보다 상위 수준의 정부에서 지역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라 상반된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Rusk(1993), Bollens and Caves(1994) 등은 외부효과가 분권적 정치구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비능률적 서비스 공급과 재정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Ostrom(1972), Parks(1991) 등은 분권화가 진행됨에 따라 다수의 상호 독립적 의사결정체가 형성되고 갈등을 해소하는 합의가 가능하게 되며,⁶⁾ 지방정부 사이의 경쟁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공공재의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분권화를 옹호하고 있다.

앞선 지역공공재의 이론 설명에서 나왔던 Oates(1972)의 분권화 정리를 보면, 지역 공공재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동일할 경우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우위성은 또한 지역에 대한 사회경제적 특징을 좀 더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가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면에서 더욱 지지받기도 한다(Oates, 1999). 이러한 견해는 Besley and Coate(1999)에서도 등장하는데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우월성은 외부효과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외부효과의 크기가 클수록 지방분권의 잠재적 이득이 줄어드는 것을 지적하였다. 한편 Lockwood(2002)는 외부효과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지역간 이질성이 더 커진다고 하여 분권화가 반드시 더 유리하지는 않다는 연구 결과도 보여주었다. 이 밖에 집권화와 분권화에 관련된 연구로서,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에 대한 이론 연구로는 Besley and Coate(2003), Redoano and Scharf(2004), Alesina and Spolaore(2003), Lorz and Willmann(2005) 등이 존재한다. 이런 이론적 연구들은 외부효과를 실제로 측정하기 보다는, 외부효과를 가정하고 이론을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는 편이다.

한편 지역공공재의 외부효과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탐구한 실증적 연구로 Brainard and Dolbear(1967), Pauly(1970), Arnott and Grieson(1981), Gordon(1983) 등이 있는데, 이들 연구는 실제로 지역공공재의 외부효과가 존재함을 보여주었지만, Bramley(1990)는 그런 외부효과의 크기가 미미할 수 있다는 회의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최근에 지역공공재의 외부효과를 측정한 실증연구로는 Murdoch et al.(1993), Case et al.(1993)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보면 외부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은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 상에서 외부효과의 방향이나 크기의 유효성에 의문의 여지는 남아있는 실정이다.

지역경제의 성과나 지방재정지출이 타 지역으로 유출·유입되는 효과에 대한 한국

6) 이 과정에서 지역공공재의 외부효과는 내부화될 수도 있다.



의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인데, 신창호(1995), 박병희(2002), 김정완(2003; 2004), 오병기(2005c; 2009) 등이 그러한 연구이다. 이 중에서 계량적으로 분석한 오병기(2005c)에서는 수도권 지역에서도 상당한 소득 및 세출의 외부효과가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지역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밝혔다. 또한 오병기(2009)는 전남과 타 광역자치단체 사이의 소득 및 세출의 외부효과 분석을 통하여 지리적 인접성이나 교통축과 상관없이 매우 다양한 외부효과가 존재함을 밝히기도 하였다.

IV. 지역경제의 성장과 지방세출의 관계

1. 케인즈 모형과 바그너 가설

앞선 〈그림 1〉의 순환과정을 이산적(離散的)으로 나누어 본다면 케인즈 모형(Keynesian Model)과 바그너(Wagner) 가설의 이론적 구조가 등장한다.

케인즈 모형의 이론적 구조가 설명력을 가지는 부분(이하 케인즈 구간)은 지방세출 증가가 지역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부분이다. 지방정부가 경상적·소비적 경비를 줄이고 투자적 경비를 증가시키며,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지역에 필요한 지방세출을 더 많이 지출한다면, 지역경제의 생산기반이 튼튼해지고 생산성이 향상되어 시간이 흐른 후 지역경제의 소득 수준이 증가하게 된다. 한편 지방세출의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이거나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는 경비라면 이러한 경제성장은 둔화되거나 오히려 지역경제가 쇠퇴하게 될 것이다.

바그너 가설이 설득력을 가지는 부분(이하 바그너 구간)은 지역경제의 성장으로 인해 새로운 정부활동이 끊임없이 추가되고 기존의 정부활동이 확충됨에 따라 재정지출이 증대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경제성장에 따라 지방세출이 증가하는 부분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뉜다. 즉, 지방정부의 일상적 재정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및 민간 경제에 대한 단순한 이전지출을 포함하여 경상적 경비가 증가하는 부분과, 지역경제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적 경비가 증가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상적 경비가 증가할수록 지방재정의 경직성이 커지고 재정운용이 비탄력적이 되어 여러 부작용을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그너 구간에서 지방세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면, 투자적 경비뿐만 아니라 경상적 경비도 증가할 것이므로, 바그너 구간의 지방세출 증가는 어떤 경비가 더 크게 증가하였는지를 통하여 가치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지역경제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보면, 대부분 케인즈 모형과 바그너 가설이 모두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모형과 분석대상 지역 및 분석방법에 따라 바그너적 관계가 주도적으로 나타나거나 케인즈적 관계가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등 엇갈린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지방세출과 지역경제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해외문헌은 주만수(2001)에 잘 정리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특정국가에서의 재정지출과 국민소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로는 Sahni and Singh(1984), Afxentiou and Serletis(1991), Holmes and Hutton(1990) 등을 들 수 있고, 횡단면 자료, 혹은 패널자료로 분석한 연구로는 Ram(1987), Hsieh and Lai(1994) 등을 들 수 있다.

지역경제 차원에서 지방세출과 지역경제 성장을 연구한 국내문헌으로는 노근호 외(1995), 주만수(2001), 오병기(2001), 오병기(2005a; 2006a; 2006b), 오병기·김대영(2005) 등이 있다. 노근호 외(1995)의 인과관계 분석을 보면 한국의 지역경제에서 케인즈 모형과 바그너 가설이 모두 성립하나, 그 중에서도 케인즈 모형이 좀 더 주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만수(2001)는 1972년부터 1996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중앙정부의 경우 부분적으로 국민소득과 정부지출 간에 양방향의 인과관계(케인즈 모형과 바그너 가설)가 존재하며 지방정부의 경우 대체적으로 바그너 가설이 더욱 설득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병기(2001) 및 오병기(2005a)의 교육및문화비 시차분석, 오병기·김대영(2005)의 사회개발비 패널 시차분석 등은 주로 케인즈 모형에 입각하여 지방세출이 지역경제의 소득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오병기(2006b)는 수도권 자료를 바탕으로 두 모형을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사회개발비와 지역소득 사이에는 케인즈 모형과 바그너 가설이 모두 성립하지만, 패널분석의 계수나 시계열분석의 시차를 비교해보면 바그너적 관계가 케인즈적 관계보다 더 주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두 이론을 한층 더 자세히 검증한 오병기(2006d)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케인즈 모형이 성립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투자적 지출이 경상적 지출보다 낮은 성과를 보였다. 게다가 광역자치단체의 투자적 지출 승수가 기초자치단체보다 낮게 나타나 광역자치단체의 세출 운용이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였다. 덧붙여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모두 소득 증가 이후 투자적 지출보다는 경상적 지출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바그너 모형이 성립함과 동시에 비효율적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전반적으로 지방세출과 지역경제에 관한 한국의 선행연구는 분석방법과 분석기간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90년대 이전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의





경우, 지방세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케인즈 모형의 설득력이 낮게 나타나나, 90년대 이후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반대로 지방세출, 특히 투자적 경비(자본적 지출)가 지역경제 성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 지역생산함수와 지방세출

정부지출의 증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유효수요를 증가시키고 사회간접자본을 형성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에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부양하고 장기적으로는 (구축효과를 감안하지 않을 때)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그런데 공공부문이 과연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양한 이견이 있는 실정이다. Rivas(2003) 같은 경우는 투자적 지출의 비중이 높은지 낮은지와 같은 정부지출의 구성 변화가 경제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Agell et al.(1997)은 공공부문의 규모와 경제성장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결론지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단순한 국가간 횡단면 회귀분석에서 통제변수를 넣거나 빼는 것만으로도 양자 사이의 관계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Atkinson(1995) 역시 복지국가와 경제적 성과 사이에 일관된 결론을 내릴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Slemrod(1995)는 다양한 연구에서 계량적 문제가 존재하기에 정부 규모의 확대가 소득 성장률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고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런 결과는 모형 설정에 관한 근본적 문제점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렇다면 먼저 공공부문의 규모 증가가 다양한 비효율적 상황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을 방해한다는 주장을 보자. 공공지출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성장이 오히려 방해받는 사례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데, 이들 국가의 경우 사양산업과 같은 불건전한 산업에 대한 이전지출 역시 높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방해받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Leonard and Audenrode, 1993). F lster and Henrekson(1999) 역시 소득이 높은 국가에서 공공지출 수준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Barro(1991) 또한 부국과 빈국을 아우르는 횡단면 자료를 토대로 비대한 공공부문이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부지출이 증가할 때 또 다른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자원조달과 관련된 조세의 자원배분 왜곡 현상에 기인한다. 가령 정부지출 증가로 인하여 이전지





출이 증가하고 동시에 과세 금액이 증가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정부지출이 증가할 수록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최근 지방정부의 이전경비 증가에 기인한 정상적 지출 증가가 경제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공공지출이 소득 성장률이나 소득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역시 존재하고 있는데, 공공지출을 투자적 지출로만 한정하여 분석하거나, 공공지출에 정상적 지출을 포함하여 분석하더라도 그 비율이 적절한 수준일 경우에는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arro, 1990; Slemrod, 1995). 예를 들어 Barro and Sala-i-Martin(1995), Hansson and Henrekson (1994)을 보면 교육 관련 공공지출은 경제 성장에 유의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Aschauer(1989)는 또한 기간산업에 대한 미국의 공공투자가 성장률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공공지출 증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공공투자가 민간자본의 수익률 증가를 가져와서 민간투자를 자극하기 때문이다(Aschauer, 1989; Easterly and Rebelo, 1993; Gramlich, 1994; Morrison and Schwartz, 1996). 즉, 공공지출은 민간자본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사회보장, 저축, 보건의료, 환경 등을 양적·질적으로 개선하여 사회에 이득을 가져오고 이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때 그러한 공공지출의 구성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Nijkamp and Poot(2004)는 93개의 선행연구를 메타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관습적인 재정정책은 성장촉진 효과가 약하게 나타났으나 교육과 기간산업에 관련된 지출은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amirez(1998)가 칠레의 자료로 검증한 결과 공공 투자지출은 생산성을 증가시켰지만 정부소비지출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보였다.⁷⁾

위와 같이 공공지출과 경제성장 사이에는 긍정적 대응관계와 부정적 대응관계가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다. 부정적 대응관계가 주목받는 경우는 고소득 국가(지역)의 경우, 공공부문의 규모가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우, 공공 투자지출보다 소비지출이나 정상적 지출의 비중이 큰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의 경우에도 정부지출 증가가 경제성장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와 케인즈적 인과관계와 바그너적 인과관계가 동시에 성립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엇갈리고 있다. Abizadeh and Yousefi(1998)에서는 전자를, Cheng and Lai(1997), 주만수(2001), 오병기(2006b, 2006d) 등은 후자를 주장하고 있다.

7) Devarajan et al.(1996) 같은 분석에서는 오히려 정상적 지출의 비중 증가가 경제성장에 유의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개발도상국의 지나친 투자적 지출 편중 현상이 이러한 분석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았다.





이하에서는 케인즈적 시각에 바탕을 두고 지방세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 배경과 실증 분석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의 투자적 지출은 지역의 기업들에게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자치단체가 투자적 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때 그 지역의 기업들은 생산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생산함수에 정부 부문을 명시적으로 반영한 선행연구로는 Barro(1990) 및 Barro and Sala-i-Martin(1995), 노근호 외(1995), 오병기(2001; 2008) 등을 들 수 있다.

Barro(1990)는 i 기업의 Cobb-Douglas 생산함수를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Y_i = AL_i^{1-\alpha} \cdot K_i^\alpha \cdot G^{1-\alpha}, \quad 0 < \alpha < 1$$

이 생산함수는 노동 및 자본에 대하여 규모의 수익이 일정한 것을 가정한 것이다. 공공재(G)의 수준이 고정되어 있다면 자본의 축적에 따른 수익은 체감하지만, 공공재 공급 수준이 자본량 증가에 따라 같이 증가한다면 수익이 체감하지는 않고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의 내생적 성장이 가능하게 된다. 위와 같은 생산함수 형태에서는 공공재의 공급 수준 증가가 노동이나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민간의 노동 투입량이나 자본 투입량과 공공재의 공급은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G 의 지수가 $1-\alpha$ 보다 작다면 자본 및 공공재 투입에 대한 규모의 수익이 체감하여 내생적 성장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반대로 지수가 α 보다 크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률이 상승하게 된다.⁸⁾

이와 같은 이론적 바탕 하에 실증적으로 지방세출의 효과를 측정한 연구는 Barro(1990), 노근호 외(1995), 오병기(2001; 2008)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다음과 같은 C-D 모형을 설정하고 있다.

$$Y_{it} = A_{it}F(K_{it}, L_{it}, G_{it})$$

여기서, i : 지역, t : 시간

Y : (1인당) 지역소득

A : 기술수준

K : 자본의 투입량

L : 노동의 투입량

G : 지방세출

8) 이상의 내용은 Barro and Sala-i-Martin(1995, pp. 152-154) 참조.





이 모형은 신고전과 생산함수 모형에 지방세출을 추가한 것이다. 이 C-D 생산함수의 양변에 자연대수를 취한다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ln Y = \alpha + \beta_1 \ln K + \beta_2 \ln L + \beta_3 \ln G$$

여기서 β_1 은 자본 투입량 한 단위의 증가가 지역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β_2 는 노동 투입량의 탄력성, β_3 는 지방세출의 탄력성을 나타낼 것이다.

한국에서 지방세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근호 외(1995)의 인과관계 분석에 의하면 지방재정지출 승수는 대략 2.158로서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반면에 김명수(1998)의 연구에서는 지역공공자본 한 단위가 증가할 때 지역내총생산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를 나타낸 계수가 대략 0.24 정도로 낮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진원(1997)에 의하면 지방재정지출이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그 해에 나타나기보다 다음해에 나타난다고 한다. 즉, 지역 간 경제력 격차를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은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효과를 노리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오병기(2001; 2006a; 2008) 등을 보면 지방세출을 투자적 지출로만 한정할 경우, 지역경제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령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 등 장별 세출을 투입한 생산함수에서 이들 투자적 지출의 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다면, 관별 세출 중에서 투자적 경비의 비율이 높은 세출만을 선별하여 이를 합한 투자적 지출 전체를 대상으로 추정하여도 지역경제의 성장에 유의하고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세출 중 경상적 경비 등을 제외한 투자적 지출은 지역경제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특히 투자적 지출에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 안목으로 계획적인 세출 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지역경제에서 지방재정은 미시적 자원배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거시적 성장의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기에 지방재정의 운용 전반에 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렇게 얻은 정보를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학계와 지역주민





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끊임없이 제도적 개선과 개혁을 이끌어냄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지방자치제의 참된 모습 중 하나일 것이다.

본고는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의 관계에 관한 경제학 이론과 실증적 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지역주민과 지방 공무원, 연구자 등에게 지역경제의 순환과정과 지방재정 이론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앞으로도 분권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므로 이러한 작업은 꼭 필요할 것이다.

한국에서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가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경제학의 다른 분야보다도 양적·질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자치제가 더 오랜 기간 시행된 후, 더 많은 이론이 발표되고 더 많은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지방재정 운용에 관한 메타 분석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준규(1999). “지역공공재의 수요함수 추정 -교통서비스를 중심으로-”, 『경제학논집』, 제8권 제2호, pp. 1-22.
- 국중호(2003). 『한국 지방세론』. 도서출판 해남.
- 김명수(1998). “공공투자와 지역경제성장”, 『경제학연구』, 제46집 제3호, pp. 279~295.
- 김봉진·김일태(2004). “한국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지출요인 분석: 중위투표자가설을 중심으로”, 『재정논집』, 제18권 제2호, pp. 29-75.
- 김성태(1994). “한국 지역공공재의 수요함수 추정”, 『경제학연구』, 제42권 제1호, pp. 145-164.
- 김정완(2003).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에 관한 연구”, 『재정연구』, 제9권 제2호, pp. 53~73.
- (2004).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에 따른 세원 조정방안: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한국지방재정논집』, 제9권 제2호, pp. 51~76.
- 노근호·정초시·김성태(1995). “한국의 지역경제성장과 지방재정: 동태적 인과관계 분





- 석을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제43집 제2호, pp. 37~64.
- 박경원·최진수(1999). “한국 지역공공재 수요함수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제4권 제1호, pp. 29~44.
- 박병희(2002). “지역경제력과 지방세수입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재정논집』, 제16권 제2호, pp. 119~137.
- 신창호(1995). “지방공공재 서비스의 지역간 유출효과와 지방정부간의 조정방안”, 『지방자치연구』, 제7권 제1호, pp. 115~134.
- 오병기(2001).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4). “한국과 일본의 지역공공재 수요함수 추정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제9권 제2호, pp. 209~236.
- (2005a). “지방자치단체 교육및문화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패널 시차분석”, 『경제교육연구』, 제12권 제1호, pp. 145~172.
- (2005b). “지방자치단체 사회개발비와 지방세입의 합리적 관계에 관한 소고”, 『재정정책논집』, 제7권 제2호, pp. 3~29.
- (2005c).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생산과 지방재정지출의 역외 유출입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제6권 제4호, pp. 81~100.
- (2006a). “비도시지역 경제개발비가 지역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제50권, pp. 163~180.
- (2006b). “서울시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와 지역소득 사이의 동태적 인과관계 검증: 케인즈 모형과 바그너 가설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제7권 제2호, pp. 131~147.
- (2006c). “지방 교육문화비의 수요함수 추정”, 『경제교육연구』, 제13권 제2호, pp. 175~195.
- (2006d). “패널자료를 이용한 지방세출의 효율성 평가”,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1권 제2호, pp. 5~31.
- (2007). “수요함수 추정에 기초한 지방 복지지출의 효율성 평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제8권 제2호, pp. 197~214.
- (2008). “지방 투자적 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친 차별적 영향 분석: 광업·제조업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제56권, pp. 23~40.
- (2009). “자치단체 사이의 경제적 연관성 분석을 통한 광역적 세출 운용의 가능성 탐구: 전남과 타 시도 사이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4권 제2호, pp. 1~24.





- 오병기·김대영(2005). “지방자치단체 사회개발비의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0권 제2호, pp. 53-84.
- 우명동(2001). 『지방재정론』. 도서출판 해남.
- 이진원(1997). “한국지역경제 성장수렴화와 성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9권 제4호, pp. 125-138.
- 전도일(2000). 『지역경제학의 이해』, 교우사.
- 주만수(200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재정지출과 국민소득의 인과관계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제6권 제1호, pp. 139-164.
- 황규선·김병현(2003). “지역공공재 수요함수의 추정”, 『재정논집』, 제18권 제1호, pp. 51~70.

〈외국문헌〉

- Abizadeh, S. and Yousefi, M.(1998). "An Empirical Analysis of Sou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and Public Expenditures Growth?", *Journal of Socio-Economics*, 27(6), pp. 687-700.
- Afxentiou, P.C. and Serletis, A.(1991). "A Time-Series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Expenditure and GDP in Canada", *Public Finance Quarterly*, 19(3), pp. 316-333.
- Agell, J., Lindh, T. and Ohlsson, H.(1997). "Growth and the Public Sector: A Critical Review Essa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3, pp. 33-52.
- Alesina, A. and Spolaore, E.(2003). *The size of nations*,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 Arnott, R. and Grieson, R.E.(1981). "Optimal Fiscal Policy for a State or Local Government", *Journal of Urban Economics*, 9, pp. 23-48.
- Aschauer, D.A.(1989). "Is Public Expenditure Productive?",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3(2), pp. 177-200.
- Atkinson, A.B.(1995). "The Welfare State and Economic Performance", *National Tax Journal*, 47, pp. 171-198.
- Barro, R.J. and Sala-i-Martin, X.(1995). *Economic growth*, New York: McGraw-Hill.
- Barro, R.J.(1990). "Government Spending in a Simple Model of Endogenous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5), S103-S125.
- (1991). "Economic Growth in a Cross-Section of Countri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6, pp. 407-443.





- Bergstrom, T.C., and Goodman, R.P.(1973). "Private Demands for Public Goods", *American Economics Review*, 63, pp. 280-296(Handbook of Public Economics, Vol. II에서 재인용).
- Besley, T. and Coate, S.(1999). "The Public Critique of Welfare Economics: An Exploration", *NBER Working Papers*, 7083,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 (2003). "Centralized versus Decentralized Provision of Local Public Goods: A Political Economy Approach",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7, pp. 2611-2637.
- Bollens, S.A. and Caves, R.W.(1994). "Countries and Land Use Regionalism: Model of Growth Govern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17(5), pp. 851-880.
- Brainard, W. and Dolbear, F.T.(1967). "The Possibility of Oversupply of Local 'Public' Goods, a Critical Not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5, pp. 86-90.
- Bramley, G.(1990). *Equalization Grants and Local Expenditure Needs*, Avebury, England.
- Case, A.C., Hines, J.R. and Rosen, H.S.(1993). "Budget Spillovers and Fiscal Policy Interdependence, Evidence from the Stat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2, pp. 285-307.
- Cheng, B.S. and Lai, T.W.(1997). "Government Expenditures and Economic Growth in South Korea: A VAR Approach", *Journal of Economic Development*, 22(1), pp. 11-24.
- Crane, R(1990). "Price Specification and the Demand for Public Good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3(1), pp. 93-106.
- Devarajan, S., Swaroop, V. and Zou, H.(1996). "The Composition of Public Expenditure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37(2), pp. 313-344.
- Easterly, W. and Rebelo, S.(1993). "Fiscal Policy and Economic Growth: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32(3), pp. 417-458.
- Edwards, J.H.Y.(1990). "Congestion Function Specification and the "Publicness" of Local Public Goods", *Journal of Urban Economics*, 27(1), pp. 80-96.
- Falch, T. and Rattsø, J.(1997). "Political Economic Determinants of School Spending in Federal States: Theory and Time-series Evidenc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3(2), pp. 299-314.
- (1999). "Local Public Choice





- of School Spending: Disaggregating the Demand Function for Educational Services",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18(3), pp. 361-373.
- F lster, S. and Henrekson, M.(1999). "Growth and the Public Sector: A Critique of the Critic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5(2), pp. 337-358.
- Gordon, R.H.(1983). "An Optimal Taxation Approach to Fiscal Federalis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8, pp. 567-86.
- Gramlich, E.M.(1994). "Infrastructure Investment: A Review Essa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2(3), pp. 1176-1196.
- Hansson, P. and Henrekson, M.(1994). "A New Framework for Testing the Effect of Government Spending on Growth and Productivity", *Public Choice*, 81, pp. 381-401.
- Heinesen, E.(2004). "Determinants of Local Public School Expenditure: a Dynamic Panel Data Model",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34(4), pp. 429-453.
- Holmes, J.M. and Hutton, P.A.(1990).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Expenditures and National Incom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2(1), pp. 87-95.
- Hsieh, E. and Lai, K.S.(1994). "Government Spending and Economic Growth: the G-7 Experience", *Applied Economics*, 26(6), pp. 535- 542.
- Leonard, J.S. and Audenrode, M.A.(1993). "Corporatism Run Amok: Job Stability and Industrial Policy in Belgium and the United States", *Economic Policy*, 17, pp. 356-400.
- Lockwood, B.(2002). "Distributive Politics and the Costs of Centralizat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69(2), pp. 313-37.
- Lorz, O. and Willmann, G.(2005). "On the Endogenous Allocation of Decision Powers in Federal Structures", *Journal of urban economics*, 57(2), pp. 242-257.
- Morrison, C.J. and Schwartz, A.E.(1996). "State Infrastructure and Productive Performance", *American Economic Review*, 86, pp. 1095-1111.
- Murdoch, J., Rahmatian, M. and Thayer, M.(1993). "A Spatially Autoregressive Median Voter Model of Recreation Expenditures", *Public Finance Quarterly*, 21, pp. 334-350.
- Musgrave, R.A. and Musgrave, P.B.(1980). *Public Finance in Theory and Practice*, 3rd ed., McGraw-Hill Kogakusha Ltd.
- Nijkamp, P. and Poot, J.(2004). "Meta-analysis of the Effect of Fiscal Policies on Long-run Growth",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 20(1), pp. 91-124.
- Oates, W.E.(1972). *Fiscal Federalism*,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1999), "An Essay on Fiscal Federalism",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7(3), pp. 1120-1149.
- Ostrom, E.(1972). "Metropolitan Reform: Propositions Derived from Two Traditions", *Social Science Quarterly*, 53, pp. 474-493.
- Parks, R.B.(1991). "Countries in the Federal system: The Interlocal Connection", *Intergovernmental Perspective*, 17, pp. 45-53.
- Pauly, M.(1970). "Optimality 'Public' Goods and Local Governments: a General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8, pp. 572-585.
- Ram, R.(1987). "Causality between Income and Government Expenditure: A Broad International Perspective", *Public Finance*, 31, pp. 393-413.
- Ramirez, M.D.(1998). "Does Public Investment Enhance Labor Productivity Growth in Chile? A Cointegration Analysis", *The North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9(1), pp. 45-65.
- Redoano, M. and Scharf, K.(2004). "The Political Economy of Policy Centralization: Direct versus Representative Democrac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 pp. 799-817.
- Rivas, L.A.(2003). "Income Taxes, Spending Composition and Long-run Growth", *European Economic Review*, 47(3), pp. 477-503.
- Romer, T. and Rosenthal, H.(1978). "Political Resource Allocation, Controlled Agendas, and the Status Quo", *Public Choice*, 33, pp. 27-43(Handbook of Public Economics, Vol. II에서 재인용).
- Rubinfeld, D.L.(1987). "The Economics of the Local Public Sector", in Auerbach, A.J. and Feldstein, M., Eds., *Handbook of Public Economics*, Vol. II, Amsterdam: North-Holland.
- Rusk, D.(1993). *Cities without Suburbs*,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 Sahni, B.S. and Singh, B.(1984). "On the Causal Directions between National Income and Government Expenditure: A Broad International Perspective", *Public Finance*, 39(3), pp. 359-393.
- Slemrod, J.(1995). "What Do Cross-country Studies Teach about Government Involvement, Prosperity, and Economic Growth?",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 pp. 373-431.
- Tiebout, C.M.(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 pp. 416-424. 